

서울 인구 22년來 최대 감소 '해석 분분'

지난해 서울 지역 총인구수가 지난 1996년 이후 최근 22년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불분명하다.

광역교통망의 발달로 자발적인 수요분산이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지난해 비친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경기권으로 내몰림 당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탈서울화의 주축이 30대에서 40대로 전환되는 모습이 관측돼, 최근 신호부부 등 청년층에 집중된 정부 지원의 '풍선 효과'로 40대 정책소외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13일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통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서울 총인구수는 976만5623명으로, 전년 말 989만7426명 대비 9만1803명(0.9%) 감소했다.

서울 인구는 지난 2010년 이후 8년째 감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서울 1000만명 붕괴 이후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 인구는 지난 1996년(1055만→1042만명) 연 18만2795명 감소 이후 최대다.

탈서울화의 근본적인 배경은 수도권 2기 신도시(2001~2023년) 개

"광역교통에 자발적 이주" vs "떠밀림 현상" 팽팽

40대 인구감소, 30대 추월... '탈서울화' 주축 전환

전문가 "청년·신혼 지원집중 40대 정책소외 우려"

발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공공기관 지방 이주 등의 영향으로 서울 거주 수요가 경기도 등 전국으로 분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 인구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3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 총인구수는 1307만7153명으로, 전년 1287만3895명 대비 20만258명(1.6%) 늘었다.

인구 증가는 2010년(32만6012명 증가) 이후 8년째로 최대다.

부동산14에 따르면 경기도 입주 물량은 2017년 12만8829호에서 지난해 16만6886호로 29.5% 증가했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동탄 등 경기 일부 지역은 SRT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의 발전으로 서울보다 입주가 더 유리해졌다"면서 "자발적인 인구 이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탈서울화가 비자발적인 결

과로 해석하는 분석도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직장과 주거간 접근성을 생각하면 누구나 서울에서 살고 싶지 않겠나"라며 "집값이 급등하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비자발적으로 이전하는 '센트리파케이션(내몰림)' 현상이 발생 중"이라며 말했다.

한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일자리가 많은 곳은 서울이고 결국 광역교통망도 서울 출퇴근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면 서울·경기 간 인구 이동에서 집값 문제는 빼놓을 수 없다"면서 "2기 신도시 정책을 통해 서울 바깥으로 인구이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 구입의 실수요자인 40대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서울에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나온다.

서울 40대 인구(40~49세)는 지

난해 159만874명으로, 전년(164만7989명) 대비 5만7615명(3.5%) 줄었다. 관련통계 작성은 시작한 1993년 이후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다. 2010년 이후 서울의 40대 인구 증감은 ▲2011년 4958명 감소 ▲2012년 8811명 감소 ▲2013년 3174명 증가 ▲2014년 9484명 감소 ▲2015년 2만7860명 감소 ▲2016년 2만8437명 감소 ▲2017년 3만183명 감소 ▲2018년 5만7615명 감소 순이다.

반면 최근 탈서울화의 주축 세대였던 30대 인구(30~39세)는 작년 154만8770명으로, 전년(157만9189명) 대비 1.9%(3만419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11년(2만9700명 감소) 이후 연간 인구 감소가 가장 적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점차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있어, 본격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집을 마련하는 연령대가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실수요자인 40대의 이탈은 서울의 정주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부에서는 청년층에 집중된 주거복지 혜택으로 40대가 상대적 박탈 세대로 전락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미 신혼부부 회망타운 등 정부 정책에서 신혼의 정의를 놓고 30대와 40대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그동안 정부 주거복지 정책은 노령층에만 맞춰져 있다가, 이번 정권 들어서는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으로 초점을 옮겨졌다"면서 "중년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값싼 소형 일대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1기 신도시(29만2000세대) 규모에 달하는 데도 청년층으로 대상을 입주 자격을 제한해 과도한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원에서 소외된 중장년층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간 1.1~1.5명으로 1명대 초반을 맴돌다가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내려갔다.

시는 교통사고사망자의 62%(299명 중 184명)를 차지하는 차 대 사람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차량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통일하는 '안전속도 5030'을 확대 적용한다. 시는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 횡단보도 20개를 확충한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이 송파구청에 이달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노후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

서울 노후 아파트 재건축 본격 시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동의서 접수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이 송파구청에 이달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시내 노후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올재모)은 지난 12일 오후 종회를 열고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700여명이 모인 이날 종회에는 일명 '스타 조합장'인 한 형기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까지 나서 올림픽아파트 안전진단 실시 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122개동 5540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그 해 6월 준공했다. 지난해 준공 30년이 되면서 재건축 가능 연한을 넘겼다.

올재모는 "1988년 정부와 서울시가 지은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안전하지 않으며 재난에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시공결함이 상당하고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제호 재건축준비위원회 대표는 지난해 2월 송파구청에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해 구정으로부터 안전진단 필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후 9월부터 올재모는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서를 받고 필요한 용역 비용 3억원 가량을 모금해 현재 목표를 달성한 상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 절차다. 주택의 노후·

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별 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건축 연한 총족 시 안전진단은 쉽게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2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안전진단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평가 항목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여 봉괴 위험에 직면하지 않는 이상 재건축이 힘들어진 것이다. 또한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 때문에 서울 시내 노후아파트가 재건축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있는 11개 단지는 재건축 연한이 됐어도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고 북동 주민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운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비강남차별저지국민연대는 지난해 10월 성명서를 내고 "생명위협 외에도 극심한 주차난·층간소음, 배관누수 등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생활고통은 건물이 쓰러질 때까지 감내 해야 하는 국민의 뜻인가"라며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해 노후아파트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시세정보서비스 '부동산테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연식은 19년8개월(19.7년)으로 집계돼 빠르면 올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20년을 돌파한다.

작년 서울 교통사고사망자 역대최소 299명

62%는 차 대 사람 사고

서울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처음으로 300명선 아래로 내려갔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2018년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44명 줄

어든 299명, 일평균 0.8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집계를 시작한 1970년래 역대 최저치다.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70년 534명에서 1980년대 이후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1989년 1371명까지 급증했다. 1990년대 들어 법 정부 차원 교통사고 줄이기를 통해

사망자가 줄었다. 2013년 교통사고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 후 사망자가 지속 감소해 2018년에는 2014년 대비 25%, 2017년 대비 13% 줄었다.

지난해 서울시내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96명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최근 10년

간 1.1~1.5명으로 1명대 초반을 맴돌다가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내려갔다.

시는 교통사고사망자의 62%(299명 중 184명)를 차지하는 차 대 사람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차량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통일하는 '안전속도 5030'을 확대 적용한다. 시는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 횡단보도 20개를 확충한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